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1. 해산·합병 등 인가 심사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(안 제6조의4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저축은행업감독규정(§15,16)은 저축은행의 합병, 해산, 영업전부의 폐지·양도·양수 인가의 심사기준을 정하고 있으나,

* 합병 또는 전환 인가 심사기준(규정§15)

- 금산법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적합할 것
- 업무 또는 영업구역의 보완, 금융구조조정 등 합병 목적이 타당할 것
- 합병후 3개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실현 가능성이 있고 영위할 수 없는 업무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정리계획이 수립되었을 것

* 해산 및 영업전부의 폐지·양도·양수 인가 심사기준(규정§16)

-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고 예금자 등 이용자보호 및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
- 「상법」·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그 밖에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을 것

- 저축은행법은 해당 행위가 인가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,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 등을 하위법령에서 정하기 위한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음

- 이에 저축은행법 개정('21.1.26. 개정, '21.7.27. 시행)을 통해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하였으며,

-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령에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

*** 상호저축은행법 既개정 내용**

제10조(해산·합병 등의 인가) ①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1. 해산·합병
2. 영업 전부(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폐업·양도 또는 양수
3. 자본금의 감소

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**(신설)**

나. 제·개정 내용

- 기존에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던 해산·합병 등 인가 심사기준을 시행령으로 격상하여 규정하고,
- 그간 별도의 심사기준이 없어 타 업권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운영 하던 ‘자본금 감소’의 인가 심사기준을 신설하여 인가 업무의 투명성 및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해산·합병 등에 대한 인가 심사기준 구체화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2. 신고 면제사항의 법적근거 마련(안 제7조의6, 제22조제1항제1호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저축은행법은 금융위 신고사항인 정관 또는 업무방법의 변경 중 ‘금융위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’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하면서
 - 감독규정에서 ‘중앙회 회장이 표준정관 및 표준업무방법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축은행이 각각 이를 변경하는 경우’를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
- 이에 감사원은 법상 금융위가 수행하도록 되어있는 사무*가 법령상 근거없이 중앙회에 위탁처리되었다고 지적하며,
 - *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미한 사항의 기준 설정
 - 법령상 위탁근거를 마련하거나, 금융위가 직접 수행토록 통보
- 이에 따라 법령상 위탁근거 마련을 위해 저축은행법을 개정하여, 신고면제 사유를 금융위 고시가 아닌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,
 -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고면제 사유를 정하려는 것임

* 상호저축은행법 既개정 내용

제10조의2(신고 사항 등) ①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	제10조의2(신고 사항 등) ① ----- ----- -----.
1. 정관을 변경(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는 경우	1. ----- <u>대통령령으로</u> ----- ----- ----
2.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을 변경(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는 경우	2. ----- <u>대통령령으로</u> ----- ----- -----

나. 제·개정 내용

- 기존 감독규정(§19)의 예외사유를 시행령에 격상하여 규정하고, 중앙회장의 표준정관 및 표준업무방법서 제·개정 권한을 보다 명확히 하며,
 - 그 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감독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권한 위탁의 법적 근거 명확화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3.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확대(안 제9조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저축은행의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의 20% 한도 내에서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 기준* 적용

* Min [자기자본 20%, 개인 8억원 · 개인사업자 50억원 · 법인 100억원]

- 국가 경제규모*, 저축은행의 자기자본 및 여신규모가 증가**하였음에도 금액한도는 '11년 이래 큰 차이없이 유지

* 명목 GDP : ('11년) 1,388조원 → ('19년) 1,919조원 (**1.38배 ↑**)

** 자기자본 : ('11말) 318억원 → ('20.9월) 1,260억원 (**3.96배 ↑**)

여신규모 : ('11말) 4,797억원 → ('20.9월) 9,270억원 (**1.93배 ↑**)

차주별 신용공여 한도 주요 연혁

차주 구분	'10.9월	'11.11월	'16.4월
최대 한도	자기자본의 20% 이내		
법인	80억원	100억원	100억원
개인사업자	6억원*	50억원	50억원
개인		6억원	8억원

* 개인사업자 및 개인 구분 없이 '그외' 차주로 분류

- 또한, 저축은행의 규모*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 한도를 적용하여 대형저축은행의 자산운용이 더욱 제약되는 측면

* 자산('20.9월말, 억원) : SBI(108,088) VS 대원(132) <819배> /

자기자본('20.9월말, 억원) : SBI(10,966) VS 대원(13) <844배>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에 한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20% 확대

(법인: 100억원 → 120억원, 개인사업자: 50억원 → 60억원)

- 대형사는 중소형사와 달리 위험관리위원회, 내부통제위원회 등 설치·운영이 의무화(지배구조법)되어있는 점 감안
-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'16년 일부 확대된 점을 감안하여 법인·개인사업자 한도 확대 이후 추이를 보아가며 검토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대형 저축은행의 경영 자율성 제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4. 유가증권 투자한도 초과 유예 사유 확대(안 제11조의2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저축은행은 유가증권 보유한도* 준수 의무가 있고 한도 초과 시 제재 대상이나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*로 한도를 초과한 경우, 다시 한도에 적합토록 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1년 부여

* 자기자본의 100% 이내(개별 유가증권 한도는 감독규정 §30에서 별도 부여)

※ 유가증권 투자한도 초과 예외사유(시행령 §11의2 ⑧ 1.~4.)

- ① 자기자본의 감소
- ② 다른 금융기관과의 계약이전, 영업 또는 주식의 양도·양수, 합병
- ③ 유가증권 발행 기업간의 영업 또는 주식의 양도·양수, 합병
- ④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저축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한도를 초과하였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

- 저축은행이 당초 한도 범위 내에서 투자하였더라도, 이후 유가증권의 가치상승으로 인해 한도 초과 시 규제위반에 해당

나. 제·개정 내용

- 보유 중인 유가증권의 가치상승으로 인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유가증권 투자한도 초과 예외사유 추가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상호저축은행이 보유 중인 유가증권의 가치상승으로 인해 과실 없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유예기간 부여 가능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